

미얀마K타운 비리... 삼성 새 타깃 되나

유재경, 최순실 추천으로 미얀마 대사임명, 삼성이 최순실 지원해주던 시기... 삼성그룹과 모종의 거래 수사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미얀마K타운 사업 과정에서 이권을 쟁기려 했던 혐의 로 조사를 받으면서 삼성그룹으로 수사가 확대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 팀은 미얀마K타운 사업비리 과정에 삼성 그룹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 을 해보겠다는 방침이어서 삼성그룹까 지 수사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맨' 출신의 유재경(58) 주미안파대 사는 1월31일 특검에 출석해 "최씨의 추천 으로 대사가 됐다"고 털어놓았다. 앞서 자신 의 인사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 해 인천공항공과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잇 따라 "사람 잘못 봤다"면서 취재진을 향해 큰소리를 친 뒤였다.

특검팀은 최씨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에 미얀마 현지 회사 M사를 참여시키 는 대가로 15%에 달하는 해당 업체 지분 을 차명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 를 벌이고 있다.

K타운 사업은 미얀마에 한류 관련 기업

이 입점할 70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하는 내용으로 추진된 정부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의 한복판에 있 던 유 대사가 미얀마 대사로 임명된 과정 과 시기를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우선 유 대사의 전임자였던 이백순 대사는 K타운사업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유 로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서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의 개입 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이 전임 대사 는 이미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아들이 이종국적자라는 이유로 경질됐는데, 당시 외교부도 그에 대한 경질이 적절하지 않 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 '깜짝발탁' 된 인물이 바로 유 대사였다. 유 대사는 삼성전기 유럽본부장 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했으며, 글로벌마케팅실장 등을 지낸 '정통 영업

맨'으로 꼽힌다.

대기업 출신 인사가 외교관으로 임명되 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다가, 유 대사 는 미얀마에 기본적도 없는 인물이었다. 게다가 유 대사가 미얀마 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5월은 삼성이 최씨에 대한 각종 지원 을 해주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또 유 대사가 근무했던 독일 프랑크푸르 트는 최씨의 각종 해외사업을 벌였던 근 거지여서, 대사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최씨 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게 아니냐 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 대사 는 특검팀 조사에서 "최씨를 여러번 만났 으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최씨가 미안 마 K타운사업을 성공시키고, 그 이권을 쟁기 위해 자신을 지원하고 있던 삼성 그룹 인사를 대사로 추천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삼성그룹측이 조직 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확 인을 해보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유 대사가 삼성에서 근무했던 사업인만큼, 최씨와 삼성의 관계가 대사업 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특검팀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 된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최씨가 유 대 사의 인사에 개입하고, 미얀마K타운사업 의 이권을 쟁기려했다는 진술을 상당수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최씨와 삼성그룹이 '부적절한 지원'을 주고받던 시기에 대사추천이 이뤄진 만큼 또다른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 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항 후 수사가 삼성그룹 관계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셈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미얀마 K 타운 관련 의혹에 연관되어 있는지는 확 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언급이 어 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 대사가 삼성 출신인 만큼 최씨와 삼성과의 관계가 영향을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

반기문 대선 불출마 선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제가 주도해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대통령을 이루겠다는 순수한 뜻을 접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정치인의 구대 의연하고 편협한 태도도 지 극히 실망스러웠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무의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 자신을 혹독하게 질책하고 싶다" 며 "이러한 결정을 한 심경에 대해 너그럽게 양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 벤처까지 확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창의성 요구되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 강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대통령 당선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정부 이후 사라진 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도 다시 구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꿈이름학교 대강당에서 국민성장 추위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기술·제도 혁명을 골자로 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밝혔다.

그는 "10년 간 2만 달러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 차기 정부는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 열 것"이라며 "세계는 초불황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한국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면서 경제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형 창업제도 육성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을 집중지원하고, 공정한 시장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상생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제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 ▲5년 동안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1만명 양성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 될 것 ▲세계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사물인터넷 망 1등 국가 ▲신산업분야 네거티브규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과 데이터규제 해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끌어올릴 것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위한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 전기자동차 산업 강국 도약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는 우려에 대해 "창의성이 요구되는 고급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면 일자리는 절대적 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이를 성공시키면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은 예로 들며 "독일은 Industry4.0(스마트팩토리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해 감소 하는 일자리의 2배 정도가 새로 만들어져 전반적으로 일자리 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도 했다. /뉴스

강영수 도의회 부의장 의원직 사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도의회 강영수 부의장이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강 부의장은 지인을 통해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냈고 환형 의장이 이를 결재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제340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14일 또는 폐회하는 23일 새로 부의장을 뽑을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 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 학교 총 6곳의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에 맡긴 후 브로커 A씨를 통해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강 부의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국회 본회의 개최식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식에 참석한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군산조선소 폐쇄, 일시적 '수주가뭉' 현상일 뿐"

이재명 성남시장, 군산 오식도동 산단 방문서 "정부가 공공공선 우선 발주 군산에 물량 줘야"

"하청이나 노동자, 경제에 관심 없이 대기업의 이익에 집중하는 기업 구조조정, 이걸 막아야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임무로, 이런 일들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군산 신영동 공설시장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 후 오식도동 산단 단지로 자리를 옮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는 일시적 수주가뭉 현상에 따른 것일 뿐으로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손실은 지역과 협력업체, 노동자가 겪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늘 군산에 오기 전 현대중공업

임원진과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은 '수주물량만 웬만큼 해결되면 가동중단을 멈출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군산조선소 폐쇄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조선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펼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이 문제"라며 "조선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전세계적 우위를 점하는 비교우위산업으로 현재의 조선경기 불황은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3년 후엔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군산조선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군산조선소 문제는 단순한 조선업 '수주가뭉'에서 시작된 문제로 정부가 2~3년 후에 발주할 군함이나 과학선 등 공공공선 등을 우선 발주해 군산에 물량을 주는 방법으로 지금의 이 불황시기를 넘기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지금 군산조선소를 문 닫고 향후 경기가 회복돼 다시 재가동 하더라도 이미 협력업체들의 인력들이 떠나 재가동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우선 정부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막기 위해 공공공선 조기발주를 제안한다"며 "현대중공업 역시 사회적 책임과 전북 그리고 군산 지역경제를 고려해 가동중단 전면 재검토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 이날 군산 오식도동 산단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이뤄진 산단 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성운 원장은 "현재 정부가 국가 돈으로 배를 지어 해운회사에 빌려주는 선박펀드가 1조원이 구성돼 있는데 이를 2~3조로 늘려 새로 건조하는 배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주면 된다"며 "어차피 해운회사에 빌려줘야 할 배가 필요한 만큼 펀드금액을 더 늘려 배를 건조하면 되는 것으로 어차피 이런 투자는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닌 미래의 자산이 된다"고 제안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보고받고 구조 지시"

김규현 수석 탄핵심판 증언, "참사는 선사·해경 등 잘못... 대통령 책임으로 볼 수 없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보고 받고 구조를 위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세월호 선사와 상황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등의 잘못으로 인해 화를 키웠고, 박 대통령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수석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 대통령 지시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보고 뒤 오전 10시15분께 전화로 모두 구조하라고 지시하고 이어 7분 후 철저히 수색해서 전원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만 김 수석은 "(지시에 따라) 김 실장이 현장상황 통솔자인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며 "당시 현장 이동 중인 해경청장에게 (지시를) 반드시 전달하라고 했고 이후 오전 11시30분께 대통령이 해경청장에 직접 전화해서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애초 전원 구조라는 보고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 박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김장수 실장이 통화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대통령이) 엄정 질책했다"며 "다시 제대로 하라고 그 뒤에 또 전화해 아드치고 다시 또 전화해서 질책하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고를 되돌아보면 참사 원

인은 선박회사가 기본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돼 대형사고가 났다"며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지도기관의 잘못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배가 기울는 참사가 일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저희가 제일 아쉽고 통탄스러운 것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신고를 받은 게 9시 조금 넘는 것으로 아는데 해경이 (사고 현장에) 갔을 때 배가 기울어 (구조가) 어려웠다고 본다"며 "당시 VTS가 신고를 받고 어떤 상황인지 선장과 교신하면서 지휘를 통해 퇴선을 시키는 등 지시를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과학적으로 보면 오전 9시 30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

장이 선원들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한 게 9시15분께"라며 "그 당시가 골든타임인데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올라오라고 말했으면 됐는데 승객들에게는 아무 말 없이 자기들만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선장도 자기 책임을 방기했지만, 퇴선권한은 선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 대응을 같이했다면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진도 VTS와 제주VTS에서 초기 대응이 잘 안 됐고 평소 훈련이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모든 나라에서 대형 재난사고나 테러 등은 모두 현장과 시스템에 따른 것이지 국가원수에게 책임 묻은 적 없다"며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뉴스